

최근 정부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생활SOC란 국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뜻하는데 체육문화시설, 어린이와 노약자 돌봄시설, 생활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시설이 우선 투자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정부가 주로 투자한 SOC가 도로, 철도, 항만 같은 대규모 기간 시설이었다면 이번에 투자계획을 발표한 생활SOC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이다.

SOC 투자 대상 전환과 함께 이번 정부 발표에서 눈에겨보아야 할 것은 사업 추진 방식의 전환이다.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지방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또 부처와 사업별로 따로 따로 시설을 공급하는 대신 이를 하나로 묶어 복합화한다. 시설 운영비 부담을 낮추고 주민과 사회경제적 조직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운영을 담보하며 국가 최소 수준에 못 미치는 정부서비스 소외지

역에 시설을 우선 공급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나타난 정부 재정 사업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번 계획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정 보완이 가능한 열린 계획안이다. 생활SOC 투자에 국민 체감도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는 여가시설보다 더 시급한 공공지원 주거시설이 생활SOC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소득 3만달러 시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이 아닌 거처인 비닐하우스, 지하실, 유탕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면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의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생활SOC’ 정책 성공하려면

위해서는 운영 소프트웨어, 즉 운영주체와 운영재원,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존 유희시설과 이번에 공급될 신규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잘 준비한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속적으로 시설 활용도를 모니터링해 이를 추가 예산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신규시설 건설 못지않게 건설된 시설의 효과적 활용에도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셋째, 생활SOC시설 복합화를 계기로 각 부처가 제각각 추진한 정책과 사업의 융복합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하나의 고유목적성을 가진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부지 선정은 쇠퇴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과, 건물 신축은 지역경관의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사업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건축사업과 결합하고 운영프로그램은 주민 참여 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정책사업들과 결합한다면 비슷한 예산으로 정부 정책의 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생활SOC 투자 대비 효과를 보이는데 지방정부가 관심을 보이게 하는 유인제도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나 주민은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통한 신규 시설을 원하지만 지금도 각 지역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저할용되는 시설이 꽤 있다.

하드웨어인 시설을 제대로 활용되기